

#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2.12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 Contents

---

- 01 KOTRA 무역관, 기업의 해외마케팅 현지 지사로 쓴다! p.1
- 02 수산식품 수출 '인증 장벽' 낮춘다... 국제인증 취득 지원 대폭 확대 p.2
- 03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 p.4
- 04 "중국 의존도 낮춘다" 산업자원안보실 1호 정책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p.6
- 05 베트남, 수입식품관리 강화... '식품안전법' 전면 개편 4월 16일 시행 예정 p.8

# 1 KOTRA 무역관, 기업의 해외마케팅 현지 지사로 쓴다!

## 2026년 지사화사업 2월 1일 개시... 1차 사업 신청 47% 증가

전 세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을 해외마케팅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2026년 지사화사업'이 2월 1일부터 시작됐다.

지사화사업은 전 세계 80개국, 124개 KOTRA 해외무역관 가운데 기업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해외마케팅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직접 지사를 설치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KOTRA 해외무역관 현지직원이나 민간 수행사를 전담 인력으로 배정해 수출과 현지 진출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가 공동 수행하며, 연간 약 5,000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희망 지역에 소재한 무역관을 복수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전담직원을 통해 바이어 발굴과 수출 계약 체결을 비롯해 전시회·상담회 참가, 세일즈 출장, 현지 유통망 입점, 판촉 쇼케이스,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여 등 해외마케팅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2월 2일 KOTRA에 따르면 같은 달 1일부터 시작된 1차 사업 모집에 신청한 기업 수는 전년 같은 차수 대비 4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를 포함한 10개 권역 모두에서 신청이 늘었으며, 특히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기업의 신청이 51% 증가해 최근 해외 시장에서의 K-소비재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강상엽 KOTRA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해외지사를 운영하기 전 단계의 기업이 KOTRA 무역관을 해외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사화사업 신청은 연간 7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 신청은 2월 12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exportvoucher.com/jisahwa](http://exportvoucher.com/jisahwa))에서 가능하다.

2

## 수산식품 수출 '인증 장벽' 낮춘다... 국제인증 취득 지원 대폭 확대

### 해수부, 50종 수출 인증에 최대 1억원 지원, 225개 기업 대상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026년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 국가별 수입요건에 따라 수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해수부는 올해 지원 대상 국제인증 종류를 기존 48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업 수도 지난해 157개사에서 225개사로 늘렸다. 인증 종류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최대 50%, 중견·중소기업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인증은 국가별 수출요건 대응을 위한 해외 식품 규격 인증과 해외 대형 유통업체 진입을 위한 수출 전략 인증으로 구분된다.

해외 식품 규격 인증(34종)

구분	인증명		구분	인증명	
할랄 (11종)	1	BJPH(MUI)	친환경 (5종)	18	USDA-NOP
	2	Warees		19	Organic EU
	3	JAKIM		20	GLOBAL GAP
	4	APHC		21	JAS
	5	KMF		22	China Organic
	6	KHA(KOREA)	품질 규격 (9종)	23	SQF
	7	ESMA		24	FSSC22000
	8	IHC		25	GMP
	9	HI-PVT		26	TRCU(EAC)
	10	AHIK		27	Gluten Free
	11	KTC		28	Non GMO
코서 (6종)	12	OK		29	Vegetarian
	13	Star-K		30	BRCGS
	14	OU		31	IFS
	15	KOF-K	32	FDA	
	16	cRc	33	FSSAI	
	17	SKS	34	EFSA(2026년 신규)	

출처 : 해양수산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2

## 수산식품 수출 '인증 장벽' 낮춘다... 국제인증 취득 지원 대폭 확대

### 해수부, 50종 수출 인증에 최대 1억원 지원, 225개 기업 대상

해외 식품 규격 인증에는 할랄, 코셔, 친환경 인증을 비롯해 비건, Non-GMO, 글루텐프리 등 품질 규격 인증과 FDA, FSSAI, EFSA 등 총 34종이 포함된다.

수출 전략 인증은 MSC-ASC 등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과 이력추적 인증, 윤리경영 인증 등 16종으로 구성됐다.

수출 전략 인증(16종)

구분	인증명		구분	인증명	
지속가능한 수산물 (5종)	1	MSC	이력추적성 (4종)	9	MSC CoC
	2	ASC		10	ASC CoC
	3	ASC-MSC		11	SWD CoC
	4	BAP		12	FOS CoC
	5	FOS	13	BSCI	
통관 (3종)	6	FSVP	윤리경영 (4종)	14	SMETA
	7	VQIP		15	ESG
	8	AEO		16	SA8000(2026년 신규)

출처 : 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국제인증이 단순한 품질 보증을 넘어 실제 수출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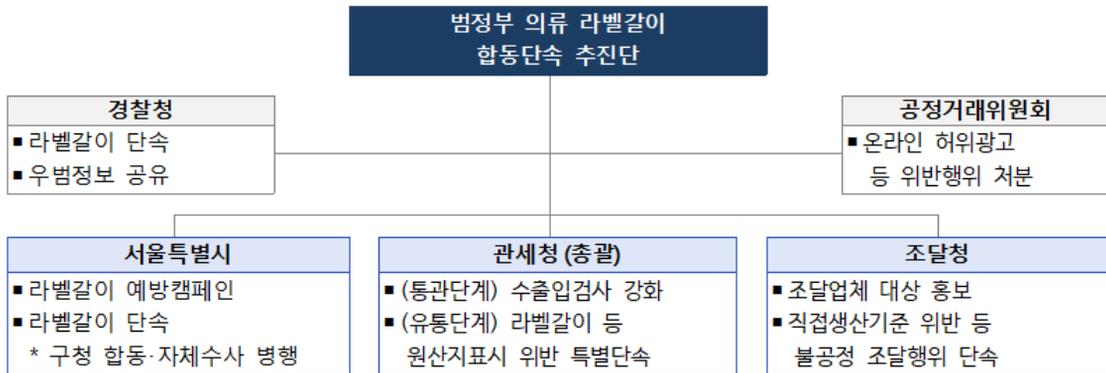
수산식품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생산·제조·유통 기업이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6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3 '라벨같이' 근절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

#### 관세청·공정위·경찰·조달청·서울시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같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벨같은 것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기만과 국내 의류 산업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적돼 왔다.



출처 : 관세청

이번 단속은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류 산업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불법 유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6일 봉제업계 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도 반영됐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3주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관세청과 서울시는 신고자에게 각각 최대 3,000만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 3 '라벨같이' 근절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

#### 관세청·공정위·경찰·조달청·서울시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합동단속 기간 정부는 외국산 의류의 국산 둔갑 여부, 수입 원재료 사용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공정 납품, 원산지 허위 광고, 외국산 의류의 국산 위장 수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이 되려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① 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②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물건, 라벨같이 의심하세요! ※ 주요 유형 4가지**



**거짓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오인표시**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경우



**미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손상변경**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출처 : 관세청

정부는 라벨같이 가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지속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4 "중국 의존도 낮춘다" 산업자원안보실 1호 정책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 통상협력·정책금융·R&D로 안정적 확보 체계 구축

정부가 첨단 제조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안보실 출범 이후 제1호 정책으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월 5일 '산업안보 공급망 TF'와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70~80%가 영구자석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이다. 이번 대책은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한 종합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 ① 희토류 수급위기 관리

산업통상부

통상협력	수급관리 강화	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간 수출협력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국간 협의를 통해 수출허가 심사 지원 체감도 제고</li> </ul> </li> <li>다층적 소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채널(공급망 회의관,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원활한 수출허가 요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광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토류 전체현 7종·17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정부정책 우선 지원</li> </ul> </li> <li>수급분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토류 전체현 1종·17종 전주기 공급량 분석 강화</li> <li>주요 희토류, 영구자석의 HSK코드 신설·세분화</li> </ul> </li> <li>지원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li> <li>기관간 실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틴전시 플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축물량 대어 방출, 긴급 수입대체, 수급조정조치 가동</li> </ul> </li> <li>위기 대응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 발생시 '공급망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 부처별 대책본부*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범정부 대책본부 구성(본부장: 재경경제부 장관)</li> </ul> </li> <li>일일 수급 상황관리 등 위기단계별 대책 시행</li> </ul> </li> </ul>

출처 : 산업통상부

우선 정부는 단기적인 수급 위기에 대비해 통상 협력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희토류 수출입 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품목 코드(HSK)를 신설·세분화해 수급 분석 역량을 높인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 4 "중국 의존도 낮춘다" 산업자원안보실 1호 정책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 통상협력·정책금융·R&D로 안정적 확보 체계 구축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기 위한 자원외교와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심의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자원개발 용자 예산은 전년 대비 285억원 늘어난 675억원으로 확대되며, 용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된다.

-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 ②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

산업통상부

전략 비축	자원개발	공급망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희토류 비축 품목 및 물량 확대</li> </ul> </li> <li>■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 비축기지 적기 구축 및 비축 목표량 확대를 고려한 추가 인프라 추진(특수청고 2 + 4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중심 지원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산업부</b> 프로젝트 전담지원부서 구성 등 핵심량을 정책 가능 강화</li> <li><b>광업공단</b> 철저한 조직쇄신을 전제로 해외자원개발 총괄 관리기능 부여, 재정 확충 (공단법 개정)</li> <li>■ 프로젝트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자원개발 투·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예산 증액(25, 390억원 + 26, 675억원)</li> <li>- 용자지원 비율 확대(25, 50% + 26, 70%)</li> </ul> </li> <li>- '25년말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펀드(2,500억원) 등 활용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 지원 강화</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수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트라 등을 활용하여 대체공급선 발굴 및 대체 수입비용 지원</li> </ul> </li> <li>■ 자원외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량용 공급망 양·다자 채널을 적극 공동하여 주요국 및 희토류 보유국과 협력 강화</li> </ul> </li> </ul>

출처 : 산업통상부

국내 희토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내재화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재자원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희토류 R&D 펀드'를 새로 조성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5

## 베트남, 수입식품관리 강화... '식품안전법' 전면 개편 4월 16일 시행 예정

### '식품안전법 시행령' 시행으로 통관 혼란 일자 '시행 유예'

전 세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을 해외마케팅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2026년 지사화사업'이 2월 1일부터 시작됐다. 베트남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 후 유예기간 없이 시행했지만, 현지 통관과 수출입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면서 적용 기간이 4월 16일로 유예됐다.

2월 3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노이지사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가 식품안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시행령(제46/2026/ND-CP)과 정부 결의안(제66.13/2026/NQ-CP)을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혼란이 불거졌다.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되면서 신선? 가공 등 모든 식품의 통관이 지연됐다. 식품검사 방법, 절차, 검사 소요시간 등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통관부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항구 도착물품에 대한 경과 규정도 없어 1월 말 기준 약 30만톤에 달하는 수입식품 물량이 국경검문소에 적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혼선이 장기화되자 결국 베트남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검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주요 항구에 24시간 인력을 배치하라는 지시와 함께 해당 시행령 적용 시기를 4월 16일로 유예했다(결의안 제09/2026/NQ-CP). 가짜 분유 유통 사건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자 제도 전반을 손질했지만, 구체적인 집행 지침이 미비한 상태에서 즉각 시행되며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준비할 수 있도록 4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베트남 식품 시장의 규제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보충식품 등 기능성식품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시장유통 이전 단계에서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가공표와 유통등록의 이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GMP, HACCP, ISO22000 등 품질관리 기준 기능성식품 생산시설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에는 국제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수입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기구·용기·포장재는 모두 국가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방식도 적합성 및 리스크 수준에 따라 강화·일반·간이검사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일부 품목에 적용되던 검사 면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입식품 관리는 한층 엄격해졌다.

이렇다보니 냉동·HMR·유가공·영유아·기능성 등 일부 품목은 '고위험'으로 분류·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HACCP, ISO 등 국제표준 달성 여부, 공정·원료·로트 추적 시스템, 시험성적서 운영을 베트남 수입·유통 파트너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노이지사는 특히 한국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프리미엄·안전' 이미지를 강점으로 삼는 동시에, 라벨링·성분 표시·품질관리·이력 추적 등 증빙 중심의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종 확정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요건의 정의와 적용 시점, 집행 일관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